

폐수 재이용업체 인센티브 확대

올해부터 산업폐수를 정수해 재이용하는 기업은 폐수배출 기본부과금을 크게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수배출 업체에 물리는 부과금을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최고 90%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 50억원 용자

경기도는 올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50억원을 용자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1월부터 올해 말까지 도(道) 및 시·군 환경관련부서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게 될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고 5억원이며 용자조건은 연리 3.75~4.75%(변동가능)

올해부터 산업폐수를 정수해 재이용하는 기업은 폐수배출 기본부과금을 크게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수배출 업체에 물리는 부과금을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최고 90%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용자대상은 소음진동방지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억제 및 방지시설, 오·폐수병합처리시설 등이다. (문의:☎<031>249-4224)

시흥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자금 0% 금리 적용

경기도 시흥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 단한푼의 이자도 받지 않고 자금을 용자지원하기로 했다.

시(市)는 최근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오염방지시설 설치업체에 대해 0%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화공단 등 관내 2천여 대기오염배출업체는 최고 5억원까지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환경개선자금으로 모두 60억원을 확보했으며 2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할 예정이다. (문의:☎<031>310-2991)

2003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 및 금리인하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沈在坤)은 최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용자지원 대상과 용도, 지원한도액을 대폭 확대하고 용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2003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규모는 600억원으로 건축비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시설자금 지원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감량화 대상사업장의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설치자금을 40억원 까지 지원하고, 사업초기의 원활한 자금수급을 위하여 창업업체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재활용업체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행 대출금리를 연 5.42%에서 5.33%로 0.09% 인하하였다.

용자신청서 접수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2003년 12월 10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 및 승인은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해당지역 한국자원재생공사 지사에서 시행한다.

(문의는 www.koreco.or.kr)

어곡지방산업단지 오·폐수 3월부터 단지내 전량처리

양산시 어곡동 어곡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오는 3월부터 산업단지내 종말처리 시설에서 전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양산시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삼성물산(주)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어곡지방산업단지 126만9천608㎡를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구역으로 지정, 폐수처

리시설의 시험가동이 끝나는 오는 3월께부터 정상적인 폐수처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어곡지방산단은 50여개 업체가 입주, 73%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하루 평균 300~400t의 오·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되지 않아 인근 양산시환경위생사업소에 위탁처리해 오고 있다.

어곡산단의 폐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하루 1만m³로 국고와 민자 등 164억여원을 투입, 지난 97년 7월 착공해 지난해말 시설설치를 완료했으며, 1월 중순부터 70일간의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신기술 적용 성공률제 확산

하수·폐수처리 등 환경분야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중인 성공률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이 점차 늘고 있다.

성공률제는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시공실적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해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환경기술개발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시설을 건설하고 시범가동이 성공적일 때 계약금, 중도, 준공금으로 나눠주던 국고 지원금을 1년 이내에 일괄 지급하는 제도.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남 영암군이 관내 축산폐수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1일 70t 처리규모의 축산폐수처리장(60억원)을 성공률제로 건설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한 데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하려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서울시는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적정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한다고 지난 12월 29일 밝혔다.

시는 VOC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도장업체에 대해 현행법상 권장사항으로만 돼있는 VOC 방지시설 설치기준(처리효율 70%)의 이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도장업체의 VOC 배출허용기준(배출용량 1만m³/h의 경우 50ppm 이하)의 적용시기를 정부가 설정한 2005년 1월에서 2004년 1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시는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중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 오존경보제 올 7월 도입

경남지역에도 올해부터 오존 경보제가 도입된다.

도는 올 7월부터 창원과 마산, 진주시 등 3개시에서 우선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오는 2004년 1

월부터는 진해와 김해, 양산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오존의 환경기준은 시간당 농도가 0.1ppm 이하로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시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도지사가 발령하게 된다.

울산시, 환경오염 13개업소 적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 업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월 13일 밝혔다.

울산시는 선별공정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을 누출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온 울주군 언양읍 덕화실업(주)은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

하수·폐수처리 등 환경분야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중인 성공률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이 점차 늘고 있다.

성공률제는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시공실적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해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환경기술개발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시설을 건설하고 시범가동이 성공적일 때 계약금, 중도, 준공금으로 나눠주던 국고 지원금을 1년 이내에 일괄 지급하는 제도.

고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울주군 웅촌면의 ㈜송원 케미칼과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울주군 웅촌면의 ㈜금호섬유공업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기 및 수질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운영 등으로 적발된 울주군 웅촌면 ㈜엔바로테크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만원 및 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중지를,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남구 여천동 이양화학(주)은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남구 선암동 ㈜대원SCN에 대해서는 조치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굴뚝TMS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남구 용연동 금호환경산업(주), 수질배출허

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야음동 대흥택시(주), 동구 전하동 울산대학병원, 일산동 한국모터스, 북구 호계셀프세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배출시설 개선명령을, 청정연료 사용의무를 위반한 동구 방어동 청송탕 및 일산동 대송탕에 대해서는 연료변경명령을 각각 내렸다.

울산시는 이번 적발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수질·대기오염 사범 54명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최병한(崔秉漢) 부부장 검사는 지난 12월 23일 크롬,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와 대기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전모(30),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시흥시 월곶동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구리, 크롬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 1.5t씩 인근 야산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또 김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방산동에 도장공장을 운영하면서 크롬화합물, 납 등을 정화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한 혐의다.

검찰은 시흥, 안산 일대 대기 및 수질오염 사범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매년 증가

지난 98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공장 등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이 최근 몇해 사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년 한해 동안 4만6천135개 업체 가운데 4천224개소(9.2%)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IMF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98년 4만8천149개 업체 가운데 2천286개소(4.8%)가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2배 가량 되는 수치로,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IMF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지난 99년 4만4천974개 업체 중 2천461개소(5.5%)가, 2000년 4만5천954개 업체 가운데 3천863개소(8.4%)가 행정조치를 받는 등 적발업소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지난 97년부터 3년간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고발 등 2개 행정조치를 동시에 받았던 업체가 764(97년), 732(98년), 800(99년)곳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3천31개소, 2001년에는 3천410개소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8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공장 등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이 최근 몇해 사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년 한 해 동안 4만6천135개 업체 가운데 4천224개소(9.2%)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제작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단속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8천351개 업소가운데 1천746개소(20.9%)를 적발했고, 인천시가 2천46개 업체 중 301개소(14.7%)를 적발했다.

**원주·횡성지역 환경시범
무더기 적발**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학근)은 지난 1월 8일 원주와 횡성지역 일대 환경시범에 대해 3개월에 걸쳐 원주시·횡성군과 합동단속을 실시, 모두 132건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18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3명은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모(52.I산업 대표)씨와 또다른 이모(50.S콘크리트 대표)씨, 도축 폐기물을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모(47.D산업 대표)씨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I산업 대표인 이씨는 지난 2001년 10월께 횡성군 공군면 소재 공장터에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페콘크리트 1만2천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다른 이씨도 지난 2000년 8월 페콘크리트 등 폐자재 1천300여t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소재 공장터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의 도계장에서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5t 가량의 도축 폐기물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

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폐수배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지난 2001년 10월께 부터 건설폐기물 34t을 사업장내에 방치해 온 S골프장 대표 박모씨 등 181명을 입건했다.

충북경찰청, 환경시범 306명 검거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도내에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27명을 구속하고 2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월 2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대기환경오염 행위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오염 행위 54명, 수질환경 오염 행위 46명,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 행위 38명, 자연환경훼손 등 기타 71명 등이다.

물이용부담금 내년 1당 10원 인상

올해부터 서울시내 각 가정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현재 1t당 110원에서 10원 인상된다.

환경부, 유독물 취급시설 7곳 고발

환경부는 울산·여천 공단 등 9개 공단 내 88개 유독물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가 부실한 7개 업소가 부실한 7개 업소(8%)를 적발해 고발과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2월 23일 밝혔다.

또 방제장비나 약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거나 방수 시설이 낡은 28개 취급시설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도록 경고했다.

적발된 7개 업소는 경기도 사회공단 내 5개 업체, 인천 남동공단 내 1개 업체, 충남 천안공단 내 1개 업체이다.

적발 업소들은 유독물을 저장탱크나 운반차량에 넣을 때 주입밸브가 아닌 일반호스를 이용하거나 저장용량보다 많이 넣다 토양이나 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독물 보관창고에 유독물과 일반화학물질을 함께 보관하는 등 관리상의 허점도 적발됐다.

법규상 유독물 저장탱크에 품목을 표시하는 규정이 없는 등 미비점도 있어 향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울산·여천 공단 등 9개 공단 내 88개 유독물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가 부실한 7개 업소(8%)를 적발해 고발과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12월 23일 밝혔다.

